



## 아동학대와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 아동학대와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

### 1.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점

#### A. 정의

- 1) 아동학대
- 2) 동물학대

#### B. 유사점

- 1) 발견의 어려움
- 2) 증거수집의 어려움
- 3) 사회적 인식
- 4) 학대 대상 보호의 문제

### 2. 아동학대 대응 체계

#### A. 학대 감시 체계

- 1)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 2) 신고의무
- 3) 적극적인 발굴 시스템 구축

#### B. 학대발생시 조사

#### C. 피해 아동 보호

#### D. 평가 및 사후 관리

### 3. 동물학대 대응단계별 개선방향

#### A. 예방 및 발견 단계

- 1) 예방단계
- 2) 발견단계

#### B. 신고 및 수사 단계

- 1) 사건수사
- 2) 피학대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C. 사후 관리 단계

## 1.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점

### A. 정의

#### 1)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제3조 제7호)으로 정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제17조에서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및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 11개 행위 열거
- 아동학대와는 별개로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정의.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해당 조항에 열거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 아동학대관련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그 대상을 보호자로 한정. 아동학대에 비해 제한적
- 오늘날 아동학대는 비단 아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체벌이나 훈육이라 할지라도 아동의 신체, 정신,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학대로 보는 추세

#### 2) 동물학대

-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필요한 혹은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이지만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 일부 행위로 제한

## B. 유사점

### 1) 발견의 어려움

- 보건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피해 사례 3만 건 중 가정 내 발생이 79.5%에 달하며, 가해자 중 75.6%는 부모인 것으로 드러남. 대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학대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우며, 제3자가 이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움.
- 동물학대의 경우 정확한 통계의 부재로 소유자등<sup>1</sup>에 의한 학대 비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경우 길고양이 등 가정 밖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다수. 하지만 가정 내 동물학대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은 것은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아동의 경우 보육 및 교육기관 등에서 관찰이 가능하며, 영유아검진 및 병원진료 등의 과정에서 학대확인 가능. 보육 및 교육기관, 병원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2018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 반면 동물의 경우 습성상 산책이 필수인 개의 경우에도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 하여 처벌이 불가, 마음먹기에 따라 외부 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학대여부 확인이 더욱 제한

<sup>1</sup>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



### 아동학대 사례1. 인천 학대 여아 탈출 사건

2015년 12월 인천에서 부모에 의하여 2년 동안 집에 감금되어 학대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A양(당시 만 11세)은 너무 배가 고파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 먹던 A양을 발견한 주인은 거울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마른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되어 구출.

A양은 2012년 8월까지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녔으나 부천시의 다른 동네로 이사한 뒤부터는 학교에 결석. A양이 다니던 학교는 A양이 7일 동안 무단결석하자 출석을 독촉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A양이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센터에 이를 통보. 부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차례로 결석 사실이 보고되었으나 A양의 가족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확인 안 되었던 것으로 파악

### 동물학대 사례1. 쓰레기 속에 혼자 방치되어 아사 직전 구조된 보더콜리

2020년 10월 서울 성동구에서 오랫동안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반려견만 몇 개월째 홀로 지내고 있다는 제보 접수.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경찰이 현장방문하여 보더콜리 한 마리 구조. 집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웃주민은 3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 동물보호담당관은 격리조치 시행.

보통 가정사란 이유로 누가 살고 있는지, 동물을 키우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웃들이 많아 동물 학대의 경우도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움.

## 2) 증거수집의 어려움

-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수집 또한 쉬지 않음. 상해 등 일부 학대 정황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아동 또는 동물 등의 '실수' 등으로 둘러대는 사례가 많으며, 실제 학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움.

- 아동이나 동물의 피해진술능력이 제한되는 점도 범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 아동의 경우 언어발달 과정에 따라 진술능력에 차이가 있고, 어느정도 성장 후에는

진술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진술을 꺼리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응하기도 함. 동물의 경우에는 언어소통이 불가해 피해여부에 대한 진술능력 전무. 미국 뉴햄프셔주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경우 불안 증상 표출 △꼬리나 생식기 부위 접촉시 과도한 예민 증세 또는 난폭한 태도 등 동물학대 징후를 제시

#### 아동학대 사례2.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13년 8월 14일, A양(사망 당시 만8세)은 복막염으로 사망.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친언니 B양(당시 만12세)으로 A양이 자신의 몇 대의 주먹과 발길질로 사망했다고 진술. 하지만 친아버지 C씨가 군청에 A양의 장례식 지원비를 문의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군청 직원이 경찰에 의뢰하면서 아동학대 사실 적발. 수사 결과 A양의 사망이 부모의 아동학대가 원인이고, 가해자로 의심받던 언니 B양 역시 죽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남.

A양이 숨지자 B양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 강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에 가둬 물고문 등을 자행

두 자매는 심각한 학대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숨김. 특히 B양은 판결이 나기 얼마 전까지도 자신이 동생을 죽인 가해자라고 주장. 이러한 아동의 특성상 학대 정황 파악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 발생

#### 동물학대 사례2. 차량 이용 동물학대 사건

2019년 5월 전북 군산에서 봉고차 뒤에 개를 묶고 운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시민이 동물자유연대에 제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영상을 증거로 경찰에 고발. 견주는 조사과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며 “15km/h로 천천히 달려 문제가 없다”고 주장. 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한 고의성 등을 확인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종결.

동물의 경우 학대에 대한 피해진술이 불가해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 발생

### 3) 사회적 인식

- 올해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 삭제. 이미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혔지만 교육 및 훈육을 위해서라면 ‘사랑의 매’가 필요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 실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징계권 삭제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식조사(‘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그 이후)에서 부모 응답자의 66.7%는 징계권 삭제로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60.7%는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
- 아동학대와 징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정당화되고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 발생
- 2019년 한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는 등의 모습을 그대로 송출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160시간의 사회봉사 선고. 당시 해당 유튜버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은 아니다“, ”내 훈육 방식“이라고 주장. 같은 해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인사건의 범인이 범행 다음날 분양 받은 새끼고양이를 자신을 할취려 했다는 이유로 내리쳐 죽인 사건 발생. 훈육을 학대범죄에 대한 변명거리로 활용

#### 아동학대 사례3.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살인사건

2013년 울산, 피해자 A양(사망 당시 만 8세)의 소풍날 소풍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사정없이 폭행. 이로 인해 A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고 부러진 갈비뼈에 폐를 다쳐 사망. 사건 초기 단순 폭행치사로 입건되어 끝나는 듯했으나 조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A양을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행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로 죄명 변경.

학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대사실이 무시되었던 사건. 국내 사회적 인식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대부분 체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체벌을 부모의 권리로 오인.

### 동물학대 사례3. 인터넷 방송에서의 동물학대 사건

2019년 7월 인천, 유튜버 A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이 기르는 허스키 종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 공개. 당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내 개를 내가 훈육하는데 무슨 상관이나”며 “시청자들의 허위 신고를 받고 오신 거다”며 조사 거부. 경찰도 이에 현장에서 철수.

A씨는 방송을 통해 훈육차원의 '체벌'이었다고 해명, "바뀔 건 없다. 제 강아지 잘못했을 때 저는 때리면서 키울 거예요. 체벌할 겁니다"라고 망언. 해당사건에서는 사회적 파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 대한 훈육과 체벌에 대해 관대. 동물학대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4) 학대 대상 보호의 문제

-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또다른 유사점은 학대 대상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임. 피학대 아동이나 동물이 학대를 가한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남아 있게 될 경우 재학대 우려가 있고, 이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있어 제약 요소로 작용
- 특히 동물의 경우 그 자체로 증거물의 성격이 있어 해당 동물을 처분함으로써 사건 은폐시도를 할 수도 있음. 2019년 5월 군산에서 봉고차 뒤에 개를 묶어 놓고 달린 사건 발생.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 경찰에 동물학대혐의로 고발했으나 별다른 격리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 요구에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시 견주는 ”개가 죽어서 산에 묻었다“고 주장
-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이 포함. 또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임시조치'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친권상실의 선고, 후견인의 변경 심판도 가능

- 반면 동물학대사건에 있어서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거나 소유자로부터 학대(동물보호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그러나 보호시점이나 판단에 대한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아동학대 사례4.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2020년 6월,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A군(사망 당시 만9세)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 소실. 병원 이송 후 6월 3일 오후 6시경 사망. 모친 B씨는 A군이 거짓말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여행용 캐리어 속에 감금했다고 경찰 조사시 진술. B씨는 A군을 가방 안에 가두어 놓고 외출을 다녀오고, A군이 가방 속에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 속에 감금. 결국, A군의 심정지 상태에서 119에 신고

처음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B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추가

A군의 아버지 C씨 역시 A군을 학대한 정황 확인. 과거 이웃 주민들이 가정폭력 의심 신고하고 A군은 병원에 입원.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의심 정황 신고도 경찰은 A군의 C씨와 B씨를 조사했지만, A군을 귀가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라는 의견에 따르면서도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 부재. 아이와 가정이 분리시 최악의 상황 방지 가능성에 대한 비판 존재

#### 동물학대 사례4. 풍차돌리기 동물 학대 사건

2020년 12월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견주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산책하던 중 강아지를 줄에 묶고 공중에 수차례 돌리는 등 동물을 학대. 당시 A씨와 B씨는 어두운 주택가 골목을 걷다 갑자기 목줄을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빙빙 돌렸고,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킁킁거리며 고통스러워 함.

강아지는 11개월령인 앓은 푸들로 사건 당일 바로 동물보호소에 격리돼 보호조치 됐으며 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검사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포항시 측은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견주가 포기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동물학대 재발 방지 서약서에 서명확인 후 격리조치 보호 비용 10만 원을 수납 뒤 격리 5일 만에 반환.

포항시가 요구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는 '(포항시가) 강아지 상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강아지를 보여줄 것' '입양 등 강아지 신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동물을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하며, 사유재산인 동물의 소유권 제한 불가. 재학대 우려에도 학대받은 동물은 대부분 다시 학대자에게 반환되고, 돌아간 이후 학대가 되고 있는지 확인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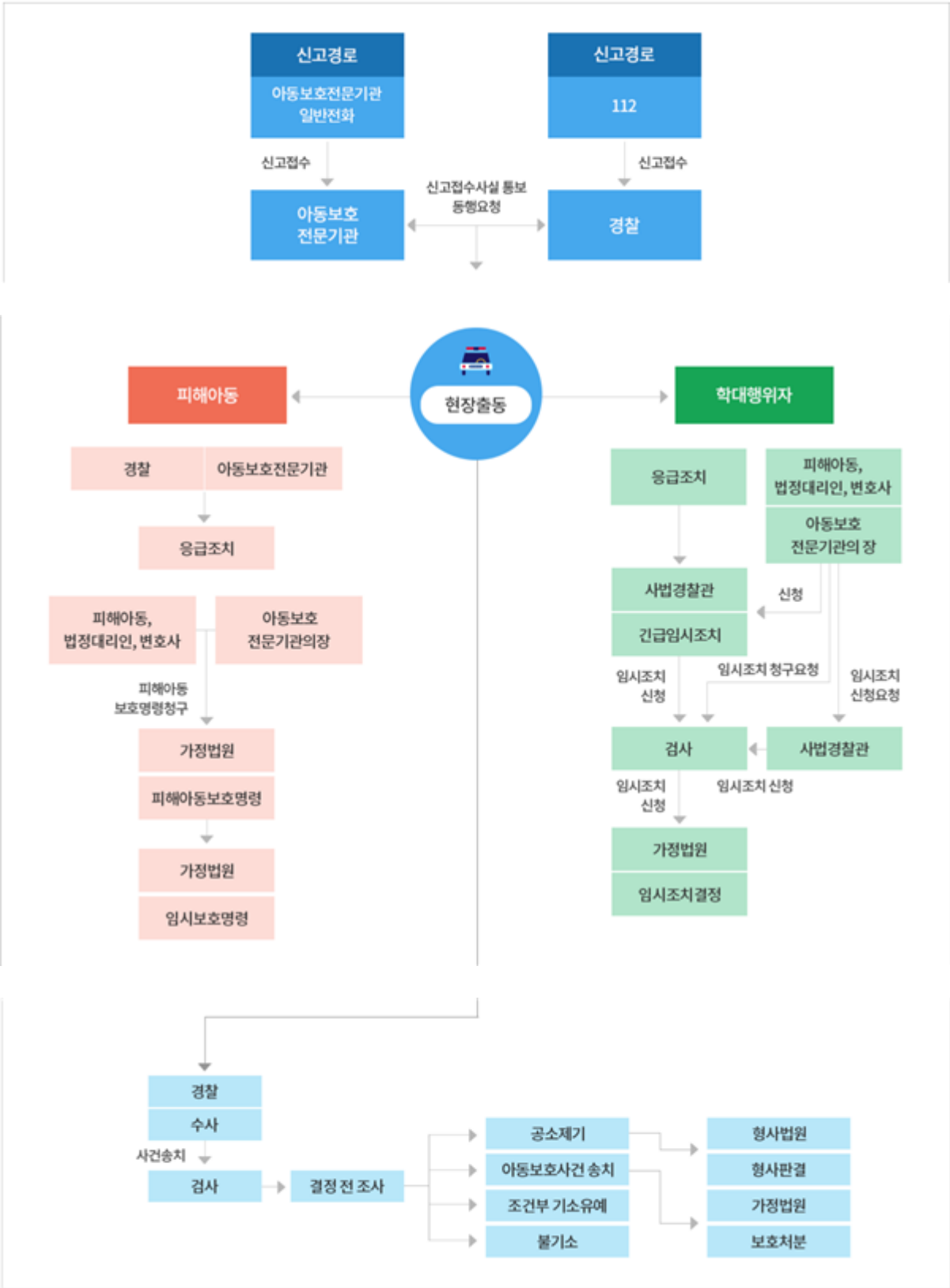
## 2. 아동학대 대응 체계

-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훈육’ 혹은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체벌’에서 사회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폭력으로 인식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음.

1979년 UN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개설한 이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 20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sup>2</sup>.

<sup>2</sup> 박선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그림1] 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권리보장원)



## A. 학대 감시 체계

- 아동 학대가 아동에게 끼칠 장·단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범치는 ‘조기 발견’중요. 그러나 아동의 양육은 오래전부터 ‘가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여겨져 외부인에 의한 발견이 어려웠을뿐만 아니라, 발견했다 하더라도 훈육과 양육방법의 문제로 여겨 잘 드러나지 않음. 최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따라 아동학대 감시 강화. 아동학대 신고자의 상당수가 제3자인 점은 아동학대 감시 의무가 관련 기관과 의무자를 넘어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

### 1)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 아동보호전문기관<sup>3</sup>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역할 수행.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을 진행.

- 최근 2020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의 역할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의 역할로 보다 강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자체를 통해서도 학대신고가 가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학대여부 판단을 직접 조사<sup>4</sup>

### 2) 신고의무

- 아동학대는 발견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를 지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는 아동과

<sup>3</sup> 「아동복지법」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sup>4</sup> 아동복지법 2020년 10월 1일 개정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의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표1]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3) 적극적인 발굴 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 기존의 신고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 읍·면·동의 공무원이 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 및 학대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대신고 및 양육환경 개선 등의 조치 진행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 4,078명. 그중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14만 2,715명(82%)에 대해 현장 조사 진행했으나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96명(0.07%)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 존재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을 병행\*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점검 및 입학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점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2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방문 인력(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응 절차,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과 업무 협조체계 등 교육 계획을 발표<sup>5</sup>

## B. 학대발생시 조사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함께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함(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 현장에 출동한 후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가해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와 질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 진행

-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라 주장하며 학대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해아동의 솔직한 의사표시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sup>6</sup>. 이와 같이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학대 범죄에 대한 조사에 조사거부, 인적자원의 부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동행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아동을 포함한 관계인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아동학대 범죄 발견에 이은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

<sup>5</sup>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2021.01.19)

<sup>6</sup> 박선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pp21-27.

### C. 피해 아동 보호

- 아동학대 범죄에서 가장 긴급하게 취해져야 할 조치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임. 가해자 및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는 필수. 보호조치는 크게 1)응급조치와 2)보호조치로 구분
- 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혹은 학대피해를 확인할 수 있고 재학대의 위험이 높은 경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해진 기간 내의 응급조치이후에도 학대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sup>7</sup>가 취해지기도 함. 보호조치는 보다 장기적인 조치로써,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학대 아동에게 상담과 보호양육 제공

[ 표2 ]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호조치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li> <li>-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li> <li>-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li> <li>-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li> </ul> <p>* 응급조치는 72시간 이내로 가능하며, 모든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p>
------	--

<sup>7</sup>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 진행</li> <li>-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지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함</li> <li>-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li> <li>-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li> <li>- 상황에 따라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소</li> <li>-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진행</li> </ul>
------	--

-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호조치의 범위가 직접적인 피해아동을 포함한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으로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아동이 입었을 피해를 고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
- 또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집행시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가 아동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혹은 양육자인 경우가 다수. 부모 혹은 양육자와 피해아동의 분리는 학대행위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일지라도, 피해아동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 아동의 의사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 병행. 임시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접근금지를 비롯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처분 가능. 그러나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100미터 이내), 아동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 가능

#### D. 평가 및 사후 관리

- 아동학대 범치는 사법처리 외 학대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학대를 가한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지원 필요.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범치의 사법처리에 대한 지원, 학대 가해자가 부모나 양육자인 경우 원가정보호를 위한 지원, 보호조치된 아동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 기관 연계 지원으로 구분
- 이러한 다방면에 이르는 지원은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고, 학대 재발 위험성 저감 가능. 평가와 사후관리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 피해아동 및 그 가족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며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이후 사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종결을 맺게 되는데, 평가의 결과에 따라 원가정 복귀가 이루어지거나 아동이 시설에 장기격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종결 결과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서 많은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 이는 아동의 보호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동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부모 혹은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 그러나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나 양육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필수.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대부분 양육방법에 대한 무지 혹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표3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피해아동 조치		사례건수(비중)
원가정보호 지속		20,165(82.0)
가정복귀	원가정보호-가정복귀	101(0.4)
	분리조치-가정복귀	888(3.6)
	기타-가정복귀	31(0.1)
	소계	1,020(4.1)

분리조치	분리조치 지속	2,841(11.5)
	원가정보호-분리조치	394(1.6)
	분리조치-분리조치	46(0.2)
	기타-분리조치	6(0.0)
	소계	3,287(13.4)
기타		101(0.4)
사망		32(0.1)
계		24,604(100.0)

### 3. 동물학대 대응단계별 개선방향

-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사적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보호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 존재. 그중 가장 큰 차이는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별로 개입절차를 세분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sup>8</sup>과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아동학대의 대응체계를 참고하는 동시에 동물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 단계별 중앙부처, 지자체, 수사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구조의 개선방향 모색 필요

#### A. 예방 및 발견 단계

- 예방 및 발견 단계는 학대행위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단계와 학대 발생시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발견단계로 구분 가능

##### 1) 예방단계

-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을 위해 일반시민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양육 태도 및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방지 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진행. 부모교육만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영유아기 자녀 부모, 학부모 등으로 대상을 나눠 교육을 진행 중

<sup>8</sup> 한국행정학회, 아동학대 수행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16, p.23.

- 반면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동물보호교육은 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지자체에서만 간헐적으로 운영. 또 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려인 대상의 펫티켓이나 사회화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동물학대 예방에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아동학대와 비교한다면 교육 내용, 교육대상, 전달체계 모든 면에 있어 부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와 같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보호교육을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교교육 등에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성인의 경우 대상을 특정해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해 추진 중인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반려동물판매업점(펫샵)에서 반려동물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에서 이러한 교육내용을 반영하거나, 현재 계획상으로는 펫샵에서 분양을 받을 때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하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거나 지인에게 받은 경우에도 이를 확대 적용 필요

[ 표4 ] 예방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동물학대 예방교육 인프라 및 전달체계 부족 2. 반려동물 입양/분양시 검증절차 부재	1-1. 민간 동물보호교육 지원 1-2. 펫샵 분양시 사전교육 의무화(시행 예정)	1-1. 학교 교육과정 내 동물학대/동물보호교육 반영 1-2. 반려동물 양육시 사전교육 의무화 2-1.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sup>9</sup>

<sup>9</sup>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은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과 향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후자를 의미한다.



## 2) 발견단계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제10조제2항).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24개 직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 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 해당 시스템은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미 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 예측.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이 직접 해당 고위험가정을 방문해 조사와 상담으로 실제 가정위기사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작동.<sup>10</sup> 이밖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배포와 교육을 진행,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제출
- 이에 반해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단 408명만 지정되어 지자체 평균 1.68명에 불과.<sup>11</sup> 동물보호법상 이들에게 주어진 직무의 범위만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로부터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등 12개 항목에 이르는 지나치게 많은 직무가 주어져 이들에게 동물학대를 예방하거나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기대하는 게 어려울 지경. 실제

<sup>10</sup> 복지포 공식 블로그, <https://blog.bokjiro.go.kr/699>, 최종접속 2020. 12. 16

<sup>11</sup>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0

2019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서도 한해 동안 이들의 위반처분실적은 30건에 불과하며<sup>12</sup>, 이는 시민 및 민간단체가 신고한 사건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 신고의무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동물보호법 제16 제2항에서 동물보호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은 동물학대를 당한 동물을 발견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규정. 하지만 아동학대와 달리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조항 부재
-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얼마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으로 아동학대의 경우 보육/기관의 출석기록, 병원기록 등을 통해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이런 기록이 없어 학대행위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려움<sup>13</sup>

[ 표5 ] 발견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반려동물 양육현황 등 기본정보 부족 2. 감시인력 및 체계의 미비 3.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 의문	1-1.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강화 1-2.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2-1. 동물보호 특사경 확충 3-1.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실시	2-1. 현재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된 동물보호감시원을 민간단체 활동가 등으로 확장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업구조 구축 2-2. 동물보호전문기관 설치 <sup>14</sup>

<sup>12</sup>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보도자료

<sup>13</sup> 2020 인구주택 총조사부터는 반려동물 양육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시켰으나 응답자가 거짓으로 답한다 해도 검증이 불가하고, 개별적인 정보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동물학대 모니터링 측면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

<sup>14</sup>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는 달리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동물복지인증제 관리 등 동물학대와 관계 없는 역할까지 수행토록 설계

		3-1.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 3-2.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교육 의무화
--	--	---

## B. 신고 및 수사 단계

-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계 수사(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현장에도 함께 출동.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동행출동은 2013년 552건에서 2016년 14,594건으로 증가.<sup>15</sup> 현장조사 후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실시, 검사를 통해 청구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를 결정

### 1) 사건수사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시 현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만 출동할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건에 대한 정보 오류가 발생하거나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며, 사건 자체가 통보 누락되기도 하고, 경찰의 1차 출동 통보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시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현장에서의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반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만 현장에 나갈 때는 학대행위자의 방해 등으로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 발생

- 동물학대의 경우에도 사건을 목격한 시민이나 동물보호단체가 신고에도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 2017년 10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서 자신의 딸이 반려동물로 키우던 햄스터 19마리 중 11마리의 목을 니퍼로 잘라 죽인 사건이 발생. 당시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 신고자가 머뭇거리자 현장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음.

- 2020년 11월에는 영업이 끝나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을 업주가 신고하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는 사이 해당 남성이 피해자의 반려견을 안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당시

<sup>15</sup> 김아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8, 2018, p.6.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확인했지만,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추후 피해자가 주변 CCTV를 확인해 남성의 납치사실을 입증. 그러나 결정적 증거에도 경찰은 “집 수색 결과 강아지가 없었다”며 “강아지는 핸드폰 급이다(물건과 같다는 의미)”, “강아지 실종은 보호소에 알아보라”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 결국 반려견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후 해당 남성의 집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 따라서 동물학대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동물학대수사 매뉴얼’을 개정/보완 하는 한편, 현장 출동시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동행하거나 협업하도록 시스템 정비 필요. 또 동물학대사건의 경우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수의사가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표6 ]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경찰의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인식부족	1-1. 경찰 수사매뉴얼 개정/보완 (완료) 1-2. 경찰 대상 직장내 교육으로 동물보호교육 진행 1-3. 현장 출동시 수의사 동행 또는 피학대 의심 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진 의무화	1-1. 동물학대사건시 동물보호단체 동행 의무화 <sup>16</sup> 1-2. 가정폭력 발생시 반려동물 이 있는 경우 동물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 병행

## 2) 피학대 동물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 또는 아동학대

<sup>16</sup> 미국의 경우 동물학대사건 발생시 동물보호단체인 ASPCA가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사건을 수사하기도 한다.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조치 가능.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법으로 규정<sup>17</sup>

- 더불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거나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일시보호 등을 조치
- 동물학대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4조에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및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격리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 △격리조치 대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재량 범위가 협소다는 점 △격리기간과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
- 그러므로 격리시점에 대해 ‘즉시’와 같이 명확히 하거나 ‘긴급격리’와 ‘보호조치’ 등으로 사안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 격리조치의 대상 역시 ‘피학대 동물 또는 학대가 우려되는 동물’로 확장하고, 격리조치 후 학대 재발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격리하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제공 필요

<sup>17</sup>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 표7 ] 피학대동물 보호조치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불분명한 격리 시점 2. 협소한 격리조치 대상 3. 불충분한 격리기간 4. 열악한 보호환경	1-1.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즉시’와 같이 시점 특정 2-1. 피학대 동물과 학대우려 동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중) 3-1. 피해가 회복된 시점 및 재발우려가 사라진 시점으로 확대 4-1. 동물보호단체로 인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1-1. 응급조치와 보호조치를 분리 3-1. 피학대 동물(학대 우려 동물 포함)에 대한 소유권 제한 4-1. 피학대동물에 대한 치료규정 마련

### 3)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현행법에서는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하거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명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도 가능
- 반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전무. 설사 피학대동물에 대해 격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3일 후 학대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조차 부재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격리조치 동물에 대한 반환 또는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표8 ] 학대행위자의 조치에 대한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부재	1-1. 격리조치 동물에 대한 반환 제한	1-1.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1-2. 동물보호단체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1-3.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C. 사후 관리 단계

- 아동학대사건의 사후 관리 단계는 피해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 아동복지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 중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관리 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치료와 상담 및 교육, 타기관과의 연계된 활동을 수행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아동치료 여부 등을 평가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 진행

- 동물학대의 경우 사후관리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피학대 동물의 보호수준은 참담한 수준으로 피학대 동물이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 없이 학대자의 손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다수. 격리 조치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온다 할지라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음. 다른 유기동물 등과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센터로 입소하는데 2019년 기준

입소동물의 46.6% 동물이 자연사 혹은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sup>18</sup>

- 따라서 향후에 동물학대 역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대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필수

[ 표9 ] 사후관리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장단기과제

문제점	단기과제	장기과제
1. 사후 관리 체계의 부재 2.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부실 3. 학대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부재	2-1. 피학대 동물보호 과정 정비(격리조치→수의사검진 및 동물병원 진료(필요시 치료 진행)→동물보호센터 입소) 3-1. 상담치료 및 동물 양육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1-1. 동물학대 사건 사례관리 체계 구축(사건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논의체 구성 등) 2-1.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별도 보호규정 마련 3-1. 소유권 제한 및 재양육시 의무교육 이수 등

<sup>18</sup> 농림축산식품부, 앞의 보도자료



## [참고문헌]

- 강은영,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김아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8, 2018
- 김지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8
- 박광동,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 박선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후유증 연구, 법무부, 2015
- 이세원,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보건사회연구 38(3), 2018
- 전영실, 윤정숙, 유진, 영유아 학대특성 및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2016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2018
- 클리프턴 P.플린, 동물학대의 사회학, 책공장더불어, 2018
- 한국행정학회, 아동학대 수행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2016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0년 5월 13일),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이은주 의원실 보도자료(2020년 10월 21일), “부실한 경찰청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재개정해야”

## [참고사이트]

- 복지로 공식 블로그, (<https://blog.bokjiro.go.kr/699>)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korea1391.go.kr/new/page/concept.php>
- IMCA, 동물학대와 사회적 안전의 상관관계  
(<https://icma.org/articles/pm-magazine/link-between-animal-cruelty-and-public-safety>)
- [구조] 오물과 쓰레기 속에 혼자 방치되었던 '샤인이'  
(<https://www.animals.or.kr/campaign/protect/56689>)
- [보도자료] 차량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다 죽게 한 학대 사건 고발  
(<https://www.animals.or.kr/report/press/55999>)
- "훈육하는데 무슨 상관" 동물 학대 의혹 유튜버 '승냥이', 처벌 국민청원 7만명 돌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000104&memberNo=1388599>)
- [이슈] 유튜버 승냥이, 동물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벌금 200만원’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10513>)
- 취불놀이하듯 학대 당한 강아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6607>)